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과 북한의 비핵화

이 기 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3-17

지난 6월 7~8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언론은 대체로 회담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분위기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안보 문제에 공을 들였지만,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강한 듯하다. 반면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새로운 대국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애초에 회담이 무엇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개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양국 정상이 주요 이슈에 대한 선호와 입장을 상호 교환하는 데 있었지, 일반 회담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은 아니었다. 즉, 상대가 어떠한 문제를 우선시하는지, 정치적 위협과 제약은 무엇인지, 각종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양국 정상 간 교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 노타이 복장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G2라는 강대국 정상들의 만남은 원래의 의도만큼 편안할 수만은 없었다. 퍼스트레이디 간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고, 중국 측의 미국 측 제공 숙소 거부, 편안한 개인적 대화보다는 회의석상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등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다소 껄끄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오바마와 시진핑의 동상이몽

양국 정상 간의 껄끄러움은 회의 중간 중간에서 자주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을 의제로 삼고 싶어 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핵확산,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및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언급했고, 더 나아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문제까지 강조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호하게 에둘러 대답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큰 틀에서 미중 간의 새로운 대국관계를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포함하기에 충분히 넓으니, 양국의 협력과 발전의 큰 청사진을 그리기를 희망한다”면서 주로 미중관계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중국계 언론은 이 상황이 40년 전 마오쩌둥과 닉슨의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소개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매우 철저한 준비를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첫 마디는 “오늘 우리는 구체적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고, 철학적인 문제(중미전략관계를 암시)를 논의합시다”였고, 이어 “구체적 문제는 저우언라이 총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선배처럼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중관계라는 큰 틀을 흔들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의 게임규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 했다. 현재까지의 규칙은 G2의 논리였다. 즉,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을 인정한다면, 세계의 2인자로서 대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는 2인자의 격에 맞는 책임과 의무의 이행 그리고 1인자의 기득권을 넘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 규칙이 상당히 맘에 들지 않거나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중국은 왕왕 2인자의 책임과 의무(혹은 양보)를 자국이 절대 G2일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외면하곤 했다. 대신 중국은 규칙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상대적 쇠락을 기회로 삼아 자국의 이익 확대에 매진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공세적인 대외행보들이 나타났고 미국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발생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엄연한 규칙 위반이었다. 미국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쉽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고, 아시아로의 회귀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협력적 공간 역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이 넓다는 표현으로 자국의 부상이 미국의 이익과 중첩되지 않으며,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불평등한 게임을 하기 보다는 새롭게 규칙을 제정해 보다 평등한 게임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만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역시도 규칙제정자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희망사항을 받아들일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대국관계에 대해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정도에서 응대하는 것으로 갈무리했다.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기존의 게임규칙을 잘 준수해 주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대국관계라는 규칙 재개정의 문제를, 미국은 구체적 이슈를 통해 기존 규칙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꿈은 미국의 꿈과 통한다며 미중 간 새로운 협력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올랐지만, 양국 정상들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꿈에 대한 해석 역시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정치·경제 관련 핫 이슈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들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일간의 회담 결과 종지로 남은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공동 성명뿐이었다.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양국이 문구 하나 하나를 협의를 통해 처리했기 때문에 해몽의 과정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 외에 많은 논의들은 결국 양측 정상의 대리인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와 공감대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양국의 회담결과에 대한 해석 역시 다소 차이가 났다. 중국 측은 새로운 대국관계에 양국정상이 동의했으며, 다오위다오·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권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 측은 사이버 안보 문제에 있어 중국이 조사에 합의했고, 중일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화해결을 희망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의 동상이몽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 일치?

회담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정상 간의 공감대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무엇보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은 양국이 공동 협력할 도전과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북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핫 이슈 처리에 있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양국의 브리핑 역시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에서는 공통된 점이 발견된다. 미국 측은 양국정상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으며, 중국 측은 역시 양국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가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발언들을 종합한 결과 드러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입장에 대한 양국의 합의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가 있으며, 새롭게 합의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기 보다는 재확인 의미의 의미가 더 강하다. 더구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북핵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았다. 그만큼 미국 측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브리핑에서 북핵 의제는 공식평가 발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양국이 북한문제에 있어 원칙적 입장과 목표에서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되는데 그쳤다. 그리고 미국의 브리핑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 곳이 있는데, 북핵 의제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급선무는 빠른 대화 회복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중국이 희망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큰 틀에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미국은 미국의 기존 입장을 중국은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유화국면을 조성하고 대화 복귀를 시사했기 때문에 일단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미국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한반도 긴장 및 위기가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늘 관련 당사국의 노력을 동시에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화 복귀를 희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후 해법은 미국에서 제시할 차례라는 부담 회피 전략을 구사할 개연성도 크다.

결국 미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보았지만, 그 구체적 방법론까지 의견을 일치시키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이 형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미중 양국이 상대국의 더 많은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행보가 공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양국의 공조에 대한 선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